

광주 교육비리 추악상 노출

자살 교육청 간부 유족 “200만원 받고 1200만원 뜯겨”

정수기 업자 “학교 운영비로 달라고 해 1200만원 줬다”

모 중학교 행정실장 “업자 협박 못이겨 경찰에 고소했다”

‘뇌물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50대 교육청 간부가 투신자살한 사건(광주일보 25일 6면)과 관련, 정수기 업자와 교육 공무원간 뇌물을 놓고 ‘불고 불리는’ 검은 유착관계가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공무원과 업자 간에 속칭 ‘취약’이라고 불리는 악성 뇌물 사슬에 걸려 결국 수뢰된 공무원이 자살한 전형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24일 투신자살한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간부 김모(56岁)의 유족들은 25일 “고인이 고교 행정실장 재직 당시 받은 돈은 200만원 뿐이었으나, W 정수기 설치업체 이모(68岁)에게 무려 1200만원을 뜯겼다”고 주장했다. 돈을 받은 사실이 탄로날까 두려워 사건 무마 조건으로 건넨 돈이라는 것이다. 가족들은 지난해 10월 이씨의

계좌로 보낸 돈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뇌물액수로 간주되자, 김씨가 억울함을 겪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제의 정수기 업자 이씨는 이날 “김씨가 행정실장을 맡고 있던 A교에 정수기 20~30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말까지 학교 운영비 명목으로 총 1200만원을 받아갔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자살한 김씨의 아파트에서 A4용지 6장분량의 유서를 수거해간 상태로, 유서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씨가 실제 협박에 의해 뇌물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뜯긴 것인지, 아니면 이씨의 주장대로 김씨가 12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인지의 단서가 담겨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광주 B중학교 행정실장 박모(56岁) 등 2명에게도 ‘정수기 대금과 받아간 돈을 계좌로 송금하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씨는 박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생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틀어지지 시작했다. 이씨는 지난해 시 교육청의 위생검사에서 자신이 A교에 설치했던 정수기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철거될 처지이고 앞으로도 이 정수기의 설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에게 지난해 10월 ‘정수기 설치 조건으로 건넨 1200만원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이후 이씨를 찾아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사건이 조용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한편, 이씨를 경찰에 고소한 박씨는 “돈을 보낸 것은 나를 믿고 일종의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보인 것 뿐”이라며 “결코 부적절한 거래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지난 2000년 당시를 믿고 광주 C중학교에 설치한 신형 정수기 대금 500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자신과 이씨의 관계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이씨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했지만, 지난해 11월 다시 ‘정수기 잔금 900만원을 보내라’는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협박을 또 다시 이씨로부터 받고 경찰에 고소하기 이르렀다.

고소장을 접수한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1월 말에 이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박씨뿐만 아니라 김씨 등 또 다른 전·현직 학교 관계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이후 이씨를 찾아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사건이 조용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한편, 이씨를 경찰에 고소한 박씨는 “돈을 보낸 것은 나를 믿고 일종의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보인 것 뿐”이라며 “결코 부적절한 거래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女高 정구부 승부조작 감사 착수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여고 정구팀 감독·코치 승부조작” 의혹(광주일보 2월 25일 6면)과 관련, 광주 D여고 정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 육체 감사팀은 진정서를 제출한 해당 학교 부부모와 정구부 A감독, B코치 등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진정서에서 언급한 내용의 진위 여부 조사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승부조작 의혹 등이 언론에 보도된 B코치는 24일 학교 측에 사표를 제출했다. /김여울기자 wool@

B코치는 “접수된 진정서의 내용처럼 부당한 돈을 받은 적도, 승부조작을 한 적도 없다”며 “다면 이 사건이 미무리가 되더라도 더 이상 정구부를 치고하기 어려울 것 같아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D여고 정구부 선수 학생 일동 및 학부모는 진정서에서 “A감독과 B코치가 상금과 실업팀 진출에 따른 계약금 일부를 부당하게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4월 광주에서 열린 전국 정구대회에서 특정 선수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B코치가 학부모와 짜고 승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여울기자 wool@

5·18 기념재단 광주항쟁 ‘진실 조사팀’ 신설

5·18 기념재단(이사장 김준태)이 5·18 광주항쟁사에서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실제가 가려진 진실을 찾기 위해 ‘조사팀’을 꾸린다.

25일 5·18 기념재단은 기자 간담회에서 “기존의 재단 3개팀을 종무기획, 진실조사, 교육홍보, 교류연대 등 4개 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작업을 3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설된 진실조사팀은 그동안 미진 했던 5·18 관련 자료의 수집, 분류, 보

존은 물론 검증, 평가, 연구 사업을 전담한다. 5·18 사료의 대상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실제가 가려진 진실을 찾기 위해 ‘조사팀’을 꾸린다.

김준태 이사장은 “진실조사팀은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밭포 명령자와 암매장 실제, 미국의 개입 여부 등 광주항쟁과 관련한 사실을 주목하고 규명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내유침 (8254)
김충우

나는
폐지로
걸고있고...
자랑스럽다
[집값3년]

소동은 거녕
기자들 질문도
[나는 받는다지?]

내가 질문 많이
해봐서 아는데...
중요치 않아

졌다
졌다
내가 저런
아는데...

삼호주얼리호 해적들

드림호 납치에도 가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들이 삼호드림호 납치에도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해적들의 배후세력을 일부 확인했고, 석해군 선장의 몸에서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탄환 3발 가운데 우리 해군의 유탄이 당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2발로 밝혀졌다.

부산지검 정점식 2차장 검사는 25일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삼호주얼리호 해적 가운데 일부가 삼호드림호 납치에도 관여했음을 확인했다”면서 아리아 등 생포된 해적 5명을 해상 강도 살인미수와 인질강도살인미수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후세력에 대해 검찰은 “소말리아 해적에게 고속 보트, 무기, 식량 등을 제공하는 투자자와 선박납치자를 하는 행동대, 선주 등과 석방대가를 협상하는 협상가가 있고, 일부 피고인들을 통해 마하드 유수프가 투자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양성철 前 광주경찰청장

함바비리 연루 소환조사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한섭)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양성철 전 광주경찰청장을 25일 오후 2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양 전 청장은 한바 브로커 유상봉(65·구속집행중·기소)씨에게서 함바 운영이나 수주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전 청장과 김병철 전 울산경찰(불구속 기소)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14일 이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로 전 보 끌령했다. /연합뉴스

헤어진 여친 찾아가 행패

○…술을 마신
성나팔
뒤 헤어진 여자친구
구 침을 찾아가 행
패를 부린 뒷난 남자친구가 경찰서 행.

○…25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박모(26·북구 두암동)씨는 지난 24일 밤 11시 30분께 광주 동구 지산동에 사는 이모(여·23岁)씨의 집 앞에 설치된 우편 수취함과 보일러 호스를 발로 차는 등 10여 분간 한바탕 소란을 피웠다는 것.

권씨는 지난해 3월 26일 서구 풍암동 한 식당에서 입찰 참가예정 업자로부터 낙찰받으면 수천만의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수락하고, 3일 뒤에는 다른 식당에서 다른 업자에게 입찰을 드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

아동 성범죄 방지 안전지도 나왔다

학교·집 어린이들 동선따라 광산구 영천초교 주변 제작

광주시 광산구가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했다.

25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말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여성가족부의 아동 성범죄 예방 정책 추진에 따라 가로 45cm·세로 30cm 크기의 아동 안전지도 제작에 착수한 뒤 최근 광산구 월곡동 영천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아동 안전지도를 최종 완성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동 안전지도를 해마다 업그레이드 하지 않을 경우 지도와 실제 현장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지도 제작을 통해 피해 예방 능력을 높이고 어린이 비행 방지 및 지역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아동 안전지도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에서 제작한 아동 안전지도는 초등학교나 동

을 기준으로 학교, 집 및 아동의 동선을 따라 재개발 철거지역, 성 범죄 우범지역, 아동 성범죄자 주 거지역, CCTV 설치지역, 배움터 지킴이집, 상담소 등 아동성폭력 관련 정보 및 인적·물적 인프라를 하나의 지도에 표시한 것이다.

구에서 제작한 아동 안전지도는

에는 영천초를 중심으로 대반초·목련초·금구초 등 학교 주변 인적이 드문 골목길과 숲길·유홍가 등 유해지역 6곳이 그림으로 표시돼 있다.

또 학교 주변 놀이터·방법용 CC-TV(폐쇄회로)가 설치돼 있는 장소도 그림으로 표시됐다. 구는 다음달 초께 아동 안전지도를 대량 인쇄한 뒤 이를 학교와 경찰서·어린이집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동 안전지도를 해마다 업그레이드 하지 않을 경우 지도와 실제 현장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지도 제작을 통해 피해 예방 능력을 높이고 어린이 비행 방지 및 지역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아동 안전지도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에서 제작한 아동 안전지도는 초등학교나 동

을 기준으로 학교, 집 및 아동의 동선을 따라 재개발 철거지역, 성 범죄 우범지역, 아동 성범죄자 주 거지역, CCTV 설치지역, 배움터 지킴이집, 상담소 등 아동성폭력 관련 정보 및 인적·물적 인프라를 하나의 지도에 표시한 것이다.

구에서 제작한 아동 안전지도는



야생동물 먹이주기

25일 장성군 내장산국립공원 남창계곡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직원들이 담비·너구리·죽제비 등 야생동물의 별자리과 배설물이 발견된 곳에 옥수수를 뿌리고 있다. 이들은 먹이주기 행사를 한 뒤 불법 설치된 몇몇을 수거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노숙자 보호시설 40대 女 숨진채 발견

을 토대로 임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다.

임씨는 지난 2002년 성주행 등의 혐의로 7년간 복역했으며 2009년 8월 출소 후 이 시설에 거주해 왔다.

임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착용 예고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임씨가 전자발찌 착용을 앞두고 심적 부담을 느끼자 자포자기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1.5%P 인하 추진

정부와 한나리당은 25일 4.9% 수준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든든 학자금)의 대출금리를 3% 중반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상기 한나리당 교육과학위원회 간사를 포함한 당 소속 국회 교육위 원들과 설운근 제1차관 등 교과부 관계자들은 오전 국회 국방부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현재 4.9% 수준인 학자금 대출금리를 0.2~1.5% 포인트 가량 낮추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든든학자금’의 대출을 맡은 한국 장학재단이 지금까지는 재단 자체 발행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진행해왔지만

금리가 더 낮은 국채를 발행하면 학자금 대출의 이자도 낮출 수 있다는 데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군 복무자에 대한 복무 기간 학자금 이자면 제도도 적용해 주민자금으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400억~5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박경호기자 jkpark@kwangju.co.kr

4대강 사업 농지 해적 혐